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구 PAC News)

www.pac.or.kr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Special News

2010년 중재위원
워크숍 개최

2010

06

C O N T E N T S

2010. Jun. Vol 120



- | | | |
|----|-----------|---|
| 03 | 이달의 주요뉴스 | 2010 중재위원 워크숍 개최 |
| 04 | 특별대담 | “지역밀착형 취재가 성공 비결”
(권 성 위원장, 일본 지방 언론사 대표들과 대담) |
| 06 | 위원단상 |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김종량 위원) |
| 07 | 직원마당 | 월드컵 열기 (예산회계팀 권영민) |
| 08 | 조정후기 | 말꼬투리 (이홍길 서울제4중재부 조사관) |
| 09 | 백승찬의 영화세상 | 홍콩의 마지막 액션 스타 견자단 |
| 10 | 용어해설 | 중재결정 |
| 11 | 해외시찰 후기 | 일본 언론 바로 알기 (홍보팀장 권오근) |
| 12 | 위원회 소식 | |
| 13 | 사건 처리현황 | |
| 14 | 위원동정 | |



2010 중재위원 워크숍 개최



2010년도 중재위원 워크숍이 10일부터 11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언론조정중재제도 운영상의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한 이번 워크숍에는 권 성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중재위원 48명이 참석했다.

박재현 제주중재부장(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첫 날 세미나에서 제1주제인 「매체별 피해구제 보도문의 실효성 제고방안」 발제를 맡은 김재원 위원(제주중재부, 제주대 통영대학원 교수)은 “언론중재법에는 피해구제 보도문을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해진 동일한 채널, 지면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만을 정했을 뿐, 좀 더 구체적 기준은 없다”며 “실질적 손해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언론사의 인식전환은 물론 사후 확인 및 면담, 다양한 피해구제 보도 방식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주제 「손해배상 제도의 정착화 모색」을 발제한 장현우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은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정착화 방안으로 “중재위원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서면 제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조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택 위원(서울제3중재부, 성균관대 신방과 교수)은 제3주제 「중재사례 확대방안」 발제에서 “중재절차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쉽게 중재신청에 이를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조정절차와 구별되는 중재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 중재위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중재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제4주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례 검토」와 제5주제 「ADR기본법(가칭) 제정 검토」는 유익선 위원(서울제7중재부,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과 조원철 중재부장(서울제6중재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각각 발표했다. 정리 / 기획팀 사진 / 김태호(총무팀)

권 성 위원장, 일본 지방 언론사 대표들과 대담

“지역밀착형 취재가 성공



▲ 권 성 위원장 일행을 맞아 대담중인 시즈오카 신문사 간부들

권 성 언론중재위원장은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현지 언론계를 시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이세신문(伊勢新聞), 시즈오카신문(静岡新聞), TV 와카야마(WTV和歌山) 등 지방 언론사를 방문하여 한국과 달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일본 지방 신문 방송의 운영상태 및 피해구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 방문처인 NHK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언론사 대표들과의 대담 내용을 재구성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권 성 위원장(이하 ‘위원장’): 일본 지방 신문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지방 신문들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기자들에게 충분한 보수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바야시 센미츠(이세신문사 대표, 이하 ‘코바야시’): 일본의 지방 신문들은 해당 지역의 독자층이 두텁고, 지역 광고 수주가 원활하여 튼튼한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민들의 신뢰도 깊은 편입니다.

쓰에키 히로후미(시즈오카신문 독자상담실장, 이하 ‘쓰에키’):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신문을 잘 읽지 않고 있고, 활자를 사용하는 매체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지방 신문사가 전국지와 차별되는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요.

쓰에키: 지역 밀착형 취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평이나 해설들도 지역주민들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며, 지면 역시 지역판의 비중을 넓혀서 메이저 신문사와 차별성을 유지합니다.

위원장: 와카야마 TV는 오사카 시내의 다른 방송사나 중앙 방송들과 방송내용이나 광고 스폰서 범위가 겹치지 않습니까?

가와구치 마사히로(와카야마 TV 상무, 이하 가와구치): 오사카 민방 TV등 다른 방송사와는 방송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규모 스폰서를 중심으로 광고를 수주하고 있으므로 주

비결”

로 큰 기업의 스폰서를 받는 대규모 방송사와 겹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 통신사에서 받는 뉴스 외에 자체 취재한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코바야시 : 자사 취재 뉴스가 약 60~70%를 차지합니다.

쓰에키 : 자체 취재기사는 1면, 사회면, 지역 기사 등 8페이지 정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 현을 크게 4개로 나누어서 4개 지역을 매일 지역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 자사의 기사가 오보라는 이유 등으로 독자나 시청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에키 : 독자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독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요망, 질문, 불편 등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오보를 해서 정정을 한 경우는 10건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독자보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보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바야시 : 독자들의 불만은 편집 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는 연간 20건 내외 정도입니다.

가와구치 : 사안에 따라 편성국 전체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담당 부서에서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사와 시청자간의 분쟁이 자체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BPO(방송 윤리 프로그램 향상 기구)에 가져갈 수도 있고, 거기서도 처리가 안 된다면 법원 소송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BPO는 시청자와 방송사간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을 하고 그 결과 방송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에 권고를 하며, 그 내용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공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강제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 NHK는 시청자의 고충과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후쿠치 시게오(NHK 회장, 이하 후쿠치) : 시청자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청자 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NHK 본부는 물론 전국 각 방송국, 지국에 '하트 플라자(Heart Plaza)'를 두어 다양한 시청자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창구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결과는 본부 시청자 센터가 취합하여 「시청자 대응보고」를 작성해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경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오보를 막기 위해 NHK 보도국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선 기자의 취재 방법이나 기사작성 방식에 대한 자율적인 지침 같은 것이 있습니까?

후쿠치 : 방송법에 따라 NHK에서 정한 '프로그램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추상적이므로 '신방송 가이드라인'도 정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항상 취재에서 방송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관계자가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 / 권오근 팀장(홍보팀)



▲ 악수를 하고 있는 권 성 위원장(왼쪽)과 NHK 후쿠치 시게오 회장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김종량 위원
(전북중재부,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얼마 전 서울 모 대학에서 어린 여학생이 어머니뻘 되는 환경미화원에게 막말을 했다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 사건은 환경미화원의 딸이 억울한 정황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히 파급되어 결국 여학생은 ‘모 대학 패륜녀’로 낙인이 찍혔다.

우리는 최근 들어 이 같은 경우를 종종 접한다. 수년 전 지하철 안에서 애완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젊은 여성의 무개념, 무도덕성이 질타를 받은 바 있고, 방송에 출연해 키 작은 사람을 루저(패배자)라고 표현했다가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받은 여성도 있다. 이 모두가 남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인성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최소한 공중도덕 개념만 가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환경도 달라졌지만 제대로 된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고는 급속한 핵가족화와 치열한 경쟁교육이 진행되면서 날로 팽배해가고 있다. 7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는 대가족 제도 아래서 생활했다. 한 울타리 안에서 3대 이상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는 방법을 익혔다. 웃어른을 모시고 여럿이 어울려 살다보면 사회적인 질서와 예절, 남에 대한 배려와 양보 등이 몸에 배기 마련이다. 학문적 교육 또한 어느 정도는 가정의 몫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1등만 기억하는 무한 경쟁사회에서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성적이고 이러한 여건에서 인성교육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요즘 세상은 사람을 만드는 일보다는 ‘무엇’이 되도록 만드는 데 더 많은 힘을 쏟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1등 지상주의와 성적 중심의 교육에 사로잡혀 소중한 인성교육을 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난히 마음을 잡아끄는 광고가 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라는 공익광고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먼저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이 광고를 볼 때마다, 부모로서 참된 자녀교육의 가치를 잘 알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회한에 잠기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부모는 이상이고 학부모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세상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도 어려운 일이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더욱 힘든 일이다.

얼마 전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김예슬 선언’을 기억한다. 고려대학교에 다니던 김예슬양이 학교를 자퇴하고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예슬양은 “스무 살이 되어서도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다”며 ‘스펙’ 쌓기 좋은 환경을 과감히 박차고 나와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내색을 하지 않을 뿐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정체성의 혼돈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자신을 찾기 전에 부모가 내모는 대로 ‘좋은 대학 가기’와 ‘스펙 쌓기’에 함몰되면서 자아를 잃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풍토 속에서 인성교육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늘 남들을 제치고 앞서 가기를 요구받는 토양에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씨앗이 싹틀 리도 만무하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일등만을 향해 달려온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나부터 참 부모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다. 내가 변해야 이 사회가 변하고 그럼으로써 교육이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살기 때문이다.

월드컵 열기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인 6월이다. 지난 월드컵은 2006년 독일월드컵이 분명함에도, 아직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다. 2002년 국민 모두가 월드컵에 한참 열광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20대 건장한 남자들 일부는 안타깝게도 군대에 있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아직 100일 휴가도 가지 못한 이등병이었던 나는 뉴스와 지인의 전화로만 그 열기와 광기를 인지할 수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군 생활 속에서 월드컵을 보며 잠시만이라도 쉴 수 있다는 것에 그 당시만은 만족을 했다. 다른 때였으면 땀병에서 훈련이나 작업을 하거나, 선임에게 얼차려를 받을 시간에 경기를 보며 쉴 수 있었으니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그 당시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이다. 1대 1로 비기면서 월드컵 열기에 불을 지피던 그 경기를 나는 1분도 보지 못했다. 야간 보초근무를 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를 보고 있지 않아도 저 멀리서 합성 소리가 들려오면 ‘아, 한국이 골을 넣었구나!’, 합성이 커지다가 탄식소리가 들려오면 ‘골이 안 들어갔구나!’, 정적 속에서 탄식소리가 힘없이 풀리면 ‘골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2시간을 보냈다.

군대에서의 월드컵은 또 다른 진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경기가 시작할 때는 계급이 낮은 후임 병들은 각을 잡고 허리를 꼴꼴이 세워서 경기를 보다가 골이 들어가고 한국이 이길 때쯤에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눈치도 보지 않고 퍼져서 경기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하나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다. 훈련장에서도 땅을 파서 자리를 만들고 천막으로 스크린을 설치한 뒤에 부대에서 가져온 튀긴 건빵과 맛스타를 나눠 마시면서 보았던 경기도 기억에 남는다. 비록 길거리에서 뜨거운 열정을 느껴보진 못했지만 군대 안에서도 한국 팀의 선전에 열광하며 응원하는 마음만은 크게 다를 것 없는 2002년이었다.

2002년을 통째로 군대에서 보낸 기억 때문에, 제대를 하고 맞이한 2006년 월드컵은 기대가 컸다. 그 때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만회하고 싶었다. 대학 대운동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골에 열광했던 토고전과, 호프집에서 치킨에 맥주를 마시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스크린 사이로도 뜨겁게 응원했던 프랑스전, 신촌서 동아리 모임을 끝내고 서성거리던 사람들을 무작정 인천으로 끌고 와 밤새워 응원했던 스위스 전까지 최선을 다해 응원했었다. 비록 16강에 올라가진 못했어도 2002년의 열기를 이어받기에는 충분했던 2006년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왜인지 이번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은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 창밖으로 시청 광장에 모여드는 붉은 티의 사람들을 보아도 별 감흥이 없고, 방송에서 끊임없이 외쳐대는 “대~한민국!”을 들어도 멍멍하기만 하다. 그것은 아마 만들어진 열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아닐까 한다. 오랜만에 청소를 하려고 맘먹고 있는 중에 어머니가 오셔서 청소 좀 하라고 나무라시면 그새 청소를 하려던 맘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너무 주변에서 월드컵이니 열광하라고 요구하는 듯해서 오히려 흥이 안 나는 2010년 월드컵이다.

그래도 월드컵이라고 친구들과 그리스 전을 함께 보았다. 흥이 안 나서인지 승패에 대한 내기를 하여도 1대 0으로 지는 것에 걸었다. 그냥 확 져버려서 다들 흥이 깨져버리기를 은근히 바랐던 모양이다. 선취골을 넣을 때만해도 시큰둥했다. 그러나 두 번째 골까지 들어가자 사정이 달라졌다.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퍼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결국 내기에서 진 것도 있고 응원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전은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고 생각하고 그 흥에 겨워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운을 즐기기도 했다.

나이지리아 전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나는 조금 바뀌었다. 나이지리아전에서 2대 0으로 이기는 것에 걸고 있고, 16강에 진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만들어진 흥이면 어때? 이렇게 흥이 나는걸. 6월 소식지가 나올 때쯤에는 한국이 더욱 더 좋은 성적을 내서 직원들과 함께 광장에서 뜨겁게 응원해 보고 싶다.



권영민
(예산회계팀)

말꼬투리

이홍길(서울제4중재부 조사관)

지난 5월 A 신문은 1면 톱기사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운찬 총리의 발언을 게재하였다. 정 총리가 충청지역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자신도 “충청서 산다면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 총리의 그간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A 신문은 오찬 당시 분위기를 상세히 묘사했고, 해당 발언에 대해 동석한 총리실 모 실장이 참석 기자들에게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했다고 게재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 보이는 보도였다. 다른 신문에서도 A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다음날부터 이를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는 해당 발언이 왜곡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즉 총리가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정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는 것이다.

반면 A 신문은 보도의 문제점은 인정하나, 국정을 운영하는 총리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므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고, 가판 보도 후 총리실의 요구에 따라 본판에 총리실의 반론을 추가하여 보도했기에 정정보도는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심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필자는 조정이 쉽지 않겠다고 느꼈다. 그러나 심리가 진행되자 A 신문의 변론에 대해 중재부는 ‘꼬투리’와 ‘가십거리’라는 2가지 키워드를 통해 A 신문의 대리인을 설득시켰다. 즉 언론사 주장처럼 총리가 단순 말실수한 것이라면 1면 톱기사가 아닌 가십성 기사로 단신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며, 제목이나 편집 등을 통해 발언 중 꼬투리에 불과한 것을 부각시킨 A 신문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반론보도 이상은 게재 불가’라는 방침을 정하고 심리에 참석한 A 신문의 대리인은 중재부의 설명에 납득하고, 정회를 요청, 회사 내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간혹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답하자면, 단연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살아가는 동안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나 자신도 종종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던 사건들이 중재위원님들의 연륜을 통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는 것을 보고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고자 새삼 다짐하게 된다.



백승찬의 영화세상

홍콩의 마지막 액션 스타 견자단



홍콩의 무협 영화에는 술한 스타들이 등장했지만, 최초의 글로벌 스타는 역시 이소룡이었다. 이소룡은 불과 5편의 영화에 출연한 뒤 요절했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사후 40년이 되도록 잊히지 않았다.

〈염문2〉는 이소룡의 스승으로 알려진 영춘권의 대가 염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다. 전편에 이어 견자단이 다시 한 번 주연을 맡았다. 견자단은 현재 홍콩 최고의 액션 배우로 확고부동한 위치를 갖고 있는 스타다. 말하자면 견자단은 〈염문〉 시리즈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셈이다.

전편에서 일본의 압제에 대항해 동포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다가 일본군의 총에 부상을 당한 염문. 2편에선 홍콩으로 건너와 새 도장을 차린다. 그러나 무술을 배우러 오는 수련생이 전무하다. 가까스로 몇 명의 수련생을 모아 도장을 꾸리지만, 이번엔 홍콩 토착 사범들이 텃세를 부린다. 사범들은 한 한 자루가 다 탈 때까지 작은 원탁 위에서 벌어지는 대련을 버텨내면 도장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말한다. 염문은 뛰어난 실력으로 도장 운영 권리를 얻어내지만, 이번엔 중국인을 무시하는 영국 출신 권투 챔피언과의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

견자단은 무술인 가족 출신이다. 1980년대부터 액션 연기와 무술 지도를 겸하면서 영화계 경력을 꾸준히 쌓았고, 〈블레이드 2〉의 무술 감독을 맡아 할리우드에 진출하기도 했다. 그가 관객

의 눈에 본격적으로 띄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이후다. 장예모의 〈영웅〉에서 이연결과 장패한 대결을 벌였던 그는 〈용호문〉, 〈도화선〉, 〈살과 량〉 등 자신의 대표작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홍콩 액션 영화의 인기는 이미 쇠퇴한 상태였다. 성룡, 이연결을 내세웠던 홍콩 액션 영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에 즈음한 영화인들의 탈홍콩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인기 장르의 작품을 복제하듯 만들어 낸 것도 홍콩 영화 이미지의 실추에 기여했다. 성룡, 이연결 등은 할리우드로 진출하거나 중국 정부와 밀착하면서 홍콩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때를 잘못 만난 견자단은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성룡, 이연결에 비해 홍콩 바깥에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질 수밖에 없었다.

견자단은 2000년대 이후 유명해진 스타지만, 나이는 이연결과 동갑인 46세다. 40대 중반의 견자단이 여전히 최고의 액션 스타인 이유는 그의 뒤를 이을만한 배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견자단이 액션 영화 찍기를 그만둔다면, 홍콩에선 더 이상 믿음직한 정통 액션 스타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염문2〉의 중반부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염문과 홍진남의 대결은 흥미진진하다. 홍콩의 토착 사범 홍진남 역을 연기한 이는 성룡, 원표 등과 함께 80년대 홍콩 영화의 트로이카로 활약하던 홍금보. 60대를 바라보는 그는 〈염문2〉의 무술 감독과 출연을 겸해 11세 연하의 견자단과 대결을 벌인다.

염문과 홍진남의 원탁 대결이 아름다운 이유는 1980년대와 2000년대의 홍콩 액션 스타가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때문이다. 현란하게 오가는 둘의 주먹과 발 사이로 홍콩 액션 영화의 어제와 오늘이 스쳐 지나간다. 공격적인 홍진남과 방어적인 염문의 동작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흥미롭다.

홍콩 영화가 옛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견자단의 액션 영화, 두기봉의 범죄 영화가 여전히 각광받고 있지만, 국제 영화제나 소수 관객에게만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과 일본 시장을 잃은 대신 중국 본토 시장을 얻었지만, 1997년 이전에 누렸던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여전히 홍콩 영화인들에게 족쇄로 여겨지고 있다. 견자단의 투혼과 함께 홍콩 액션 영화의 맥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중재결정

지난 호까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결과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정은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 해결하는 절차인 반면, 중재위원회의 또 다른 절차인 중재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함은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본지 제115호 10면 참조)

중재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을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재를 받고자 하는 양측은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중재합의서를 중재신청서와 함께 중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조정심리조서에 당사자의 중재의사가 기재된 경우나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인정됩니다.

중재는 조정절차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지만 분쟁의 성격상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에는 이를 중재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 조사관은 중재가 적합하거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언론조정중재규칙 제31조의2) 중재부는 심리를 진행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절차 중에 화해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중재부는 합의된 내용대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중재화해결정이라고 합니다. (홍보팀)

BOOK

이 달에 들어온 책

임 미 숙 (정책연구팀)

지역미디어

한진만 외 13인 공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308페이지



한국방송학회 내에 설치된 지역미디어 특별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미디어 융합 시대 지역미디어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담은 지역언론 개론서로 지역미디어 종사자, 예비 언론인들이 읽어볼 것을 권한다.

지역미디어의 환경, 산업, 미래 등 3가지 단원으로 분류하여 지역미디어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중점적인 기술을 펼치는 한편, 각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저자들은 지역미디어가 독자적 경영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중앙 의존적인 존재로 남아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지 못함과 동시에 지역경제가 뒷받침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민영 미디어랩의 등장,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대자본의 유입, 신문과 방송의 경영, 종합편성채널의 허가 등에 맞서 지역미디어는 어려움에 놓여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미디어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지역 문화 - 미디어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지역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미디어가 개인의 삶의 기반인 '지역'이라는 공간적, 규범적, 사회적 단위를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가상의 공간까지 확대해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김양은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304페이지



이 책은 미디어 리터러시 이론과 개념을 한눈에 정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디지털 세대의 등장과 이에 따른 미디어 교육의 변화를 개념, 목표,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역설한다.

미디어가 개별화되고 미디어 생산자가 늘어갈수록 미디어 교육은 새로운 사회를 밝히는 지표가 된다고 볼 때, 미디어 교육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임에 분명하다.

일본 언론 바로 알기

N O O O O

권오근 팀장 (홍보팀)

일본의 신문은 명치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9년 일본의 하루 신문 발행부수 합계는 약 5,035만부로 5,287만 세대에 95%에 달하는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1880년을 전후하여 아사히신문(朝日新聞),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등 오사카계(大阪系)의 양대 신문을 중심으로 대중신문의 시대를 맞아 오늘날에 이른다. 일본의 신문계는 전국지, 광역 블록지, 현(縣)단위 지방지로 구성된다. 스포츠·예능 전문지나 정당지, 종교지 등 특화지도 다양하다.

일본 방송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전에는 공공방송인 NHK만 있었으나 1951년부터 민간방송이 시작되었다. 방송은 그 형태별로 지상계는 NHK와 민간방송(민방), 위성계는 BS(위성방송)와 CS(통신위성)방송, 케이블계는 케이블 TV와 전기통신 이용 방송으로 구분된다. 또 IPTV 등 인터넷방송과 '원세그' 서비스로 불리는 모바일방송이 있다. 통신사로는 교도통신(共同通信)과 지지통신(時事通信)이 있다.

1925년 도쿄방송협회가 본 방송을 시작한 이래 방송은 거대 신문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도쿄방송협회의 임원들 중에는 도쿄 아사히를 비롯한 여러 신문사의 임원이 포함되었고, 각 신문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수정 없이 제공받은 순서대로 방송할 정도였다. 1951년 일본 내 민간방송이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서 민방의 면허신청자는 주로 각 지역에 산재한 신문사들이었다. 당시 일본은 군부의 미디어 통제정책에 따라 일본의 각 현에 있었던 다수의 지방지를 하나로 통폐합해 '일현일지(一縣一紙)' 체제가 구축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정책 하에 일본 각 지방에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강력한 지방지가 자리 잡게 되었다. 민방의 개국에 지방지의 개입이 당연시된 이유다.

신문과 방송의 밀착은 신문사의 재력이 방송국의 경영적 안정을 유지하게 했고 신문사의 취재능력과 기능이 TV뉴스에 반영돼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제휴의 순기능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의 거대 신문사는 전통적으로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어 동일 자본 성격을 지닌 일본의 민방이 신문사의 논조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역기능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본민방에 NHK 못지 않은 고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한편, 지방지와 로컬 방송국은 오랜 기간 지자체와의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밀착형 미디어로서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져왔다. 특히 지방지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헌법 9조(전쟁포기조항) 개정 반대하는 등의 논조로 평화주의를 호소하고, 지역민과 지역의 현안을 중시해온 결과, 오늘날 거대신문 3사(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의 독자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독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장구한 역사를 지닌 일본의 언론이 '오보 방지와 보도에 따른 인권피해의 사전·사후 보호망'에 있어서는 취약한 편이다. 특종 우선과 집단적 과잉취재라는 일본식 취재관행에서 비롯된 「산호초 훼손조작」(1989), 「고베 아동살해사건」(1997), 「와카야마 카레 살인사건」(1998), 「아루아루 대사전 - 쿡 발효식품」(2008), 「북한 김정은 인물사진」(2009~2010) 등과 같은 잘못된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언론의 사회적 책임시스템은 자율적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문사의 지면 심사제도, 방송사의 프로그램 심의기관과 JPO(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가 그것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프레스 옴부즈맨이나 프레스협회의 회 그리고 미국언론의 사내 옴부즈맨과는 다른 일본만의 독특한 제도다. 옴부즈맨이나 프레스평의회가 사전심의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들 기구는 사후 심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면 심사기구와 방송 심의기구는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등의 인권문제를 심의하는데 대부분이 사장 직속이나 편집국(보도국) 소속이다. 그 실효성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NHK와 민영방송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BPO의 경우도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언론이 스스로 정한 약속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지 못하면 종국적으로는 외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일본 내에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인권침해구제기관의 설치여론이 명분을 얻어가고 있다. 또 일본 총무성이 방송 프로그램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독립 행정위원회(일본식 FCC)를 만들어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다고 한다. 일본식 자율규제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발족



오는 7월 28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5월 31일자로 설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기에 따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보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심의위원장에 양삼승 위원(63.번호사)을, 부위원장에 박기동 위원(53.번호사)을 각각 선출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8월27일까지 90일간에 걸쳐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객관성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위원장 이외 7명의 심의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조병철(57.전 세계일보 주필) ▲이용성(47.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병설(58.배재대 초빙교수) ▲김동규(51.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정근(53.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 ▲박문용(65.공선협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한국연(56.전 언론중재위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스리랑카 데일리 뉴스 편집장 내방

스리랑카 최대 영문 일간지인 데일리 뉴스(Daily News) 자야틸레케 드 실바(K.K.N. Jayatilleke de Silva) 편집장이 5월 31일 중재위원회를 방문했다. 스리랑카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드 실바 편집장은 중재위원회 권성위원장을 예방하여 스리랑카의 언론 불만처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양국 언론관련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사무처 직원 집체연수

2010년도 사무처 직원 집체연수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경북 영주 선비수련원에서 개최됐다. 전국의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이 참가한 이번 집체연수는 최근덕 성균관장(전 성균관대 유학대학장) 초청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연수 첫 날 「현대사회와 전통사상」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최근덕 성균관장은 유·불·선으로 요약되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이 현대 사회에 갖는 의미를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풀이해 직원들의 갈채를 받았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는 논어의 첫 구절을 인용해 강연을 시작한 최 관장은 “우리 전통 사상은 토속 신앙, 유교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분류하고, 이를 비교 설명했다. 현대 사회에서 전통사상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대가 급격히 변해 우리의 물질문명도 서양을 따라잡게 되었지만 그 대신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며 “우리의 전통사상을 현대의 사회 구조에 비춰서 알맞게 정립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의를 들은 한 직원은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최 관장님이 위트와 해학을 섞어 재미있게 강의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고 수강 소감을 말했다.

초청강연 이후에 직원들은 토론 시간과 체육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다졌으며, 둘째 날에는 인근 소수서원과 부석사 무량수전을 둘러보며 조상들의 숨결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5월말 현재 조정신청 1,236건

사건 처리현황

N O O O O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5월까지 모두 1,236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314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79건(동의 64건, 이의 15건), 조정불성립결정 63건, 기각 76건, 취하 695건, 계류 9건이며, 피해구제율은 83.2%를 나타냈다. 피신청인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285건, 신문 251건, 방송 80건, 뉴스통신 19건, 잡지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재위원회는 5월까지 45건의 중재사건을 접수하여 44건의 중재결정과 1건의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25건, 반론청구 17건, 추후청구 2건, 손해청구 1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5월 24일 열린 2010년도 제5차 회의에서 자체심의 한 언론보도 중 총 21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은 피의자 신원공개 3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1건, 범죄사건 피해자 신원공개 1건, 자살자 신원공개가 16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0건, 일간지 8건, 뉴스통신 2건, 주간지 1건이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 현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발족 이후 6월 10일 현재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정기간행물 445개 매체를 자체심의한 결과 총 160건의 선거기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 100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위반 24건, '광고 제한' 위반 4건, '외부기고' 위반 32건이다. 결정내용별로는 경고문 게재 결정 8건, 경고 91건, 주의 45건, 권고 16건이다.

한편, 후보자의 시정요구는 18건이 접수되어 경고문게재 결정 4건, 정정보도 게재결정 2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결정 2건,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 4건, 권고 결정 1건, 기각 결정 4건, 각하 결정 1건이 내려졌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5월까지 1,068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8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98건, 타기관 안내가 89건, 재상담 예정 52건, 법적절차 안내 40건, 자체종결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485건, 일간신문 404건, 인터넷신문 388건, 방송 232건, 주간신문 177건, 뉴스통신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5월 4일 한국교원대학교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5월 한달 동안 14차례의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기관별로는 교육연수기관 5건, 언론사 4건, 대학4건, 기타 1건이다.

COMMITTEEMEN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선정

권 성 위원장은 5월 2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법대동창회(회장 김정국)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이 날 총회에서 김 회장은 “권 위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소할 수 있는 헌법적 논리를 제시해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였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권 위원장도 “공직에 있는 동안 나라가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어 중용과 균형을 잃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나름대로 저울의 추를 반대로 당겨 균형과 중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중용과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저울의 추를 반대로 당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의 소임이고 합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했다”고 현창에 답했다.



이미래기획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 제7차 회의 참석

박성희 위원(서울제1중재부, 이화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사진 오른쪽)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박승준) 제7차 회의에 참석했다. 미래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관, 미래 분야 전문가 및 30년후 주인공이 될 남녀 고교생 등 약 160명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는 KDI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2040년대를 한 세대 앞서 전망한 “미래비전 2040” 보고서 등이 발표되었다.



재·보궐선거방송심의위원

재·보궐선거 방송심의위원장으로 선출

여경택 위원(서울제5중재부,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사진 왼쪽)은 5월 31일 재·보궐선거 관련 방송심의 직무수행을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1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처음으로 구성된 재·보궐선거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와 학계, 언론단체, 정당 등의 추천을 받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현, 노장의 커뮤니케이션」 출간

김정탁 위원(서울제3중재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지난 5월 동아시아 전통의 노장(老莊) 사상을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재해석한 「현, 노장의 커뮤니케이션」을 출간했다.



김길소위원

“TV쇼 진품명품” 감정위원

김길소 위원(강원중재부, 전 강원일보 상무이사)은 지난 5월 23일 KBS 1TV에서 방영된 “TV쇼 진품명품” 프로그램에 전문가 감정위원으로 출연하여 일반인이 출품한 전통 놀이기구를 감정하고 전래 오락에 대해 설명했다.



SN

“KBS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 사회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진 가운데)은 지난 14일 목동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4년 세계 대표 공영방송’ 도약을 위한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KBS 주최)에서 사회를 맡았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 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① 신청기간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②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신청서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것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메일,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등 전자문서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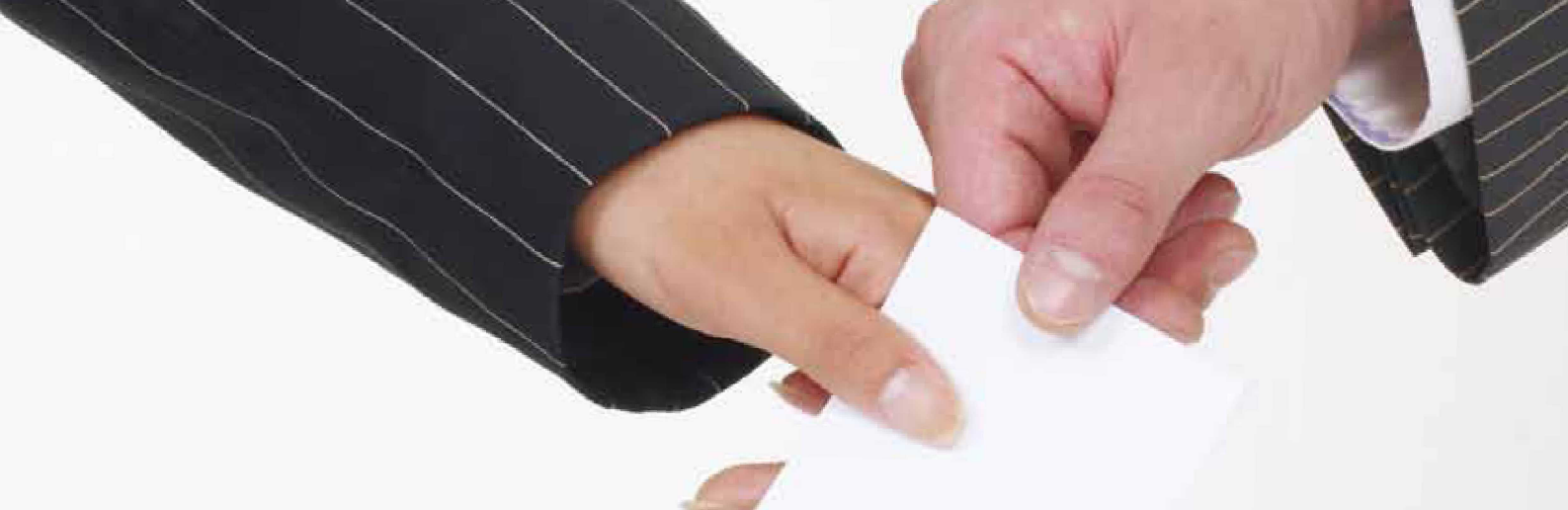
상담 전화번호 02)397-3000, 3010, 310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100-750)





바른후보,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려 공명정대한 선거보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0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기사 심의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불공정 보도로 인한 선거후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사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 시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등의 결정을 내리고, 시정요구 사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선거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회부사건을 심의합니다.

선거기사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